

第288回國會 (臨時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3月29日(月)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업무현황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교육과학기술부
  - 다. 농림수산식품부
  - 라. 지식경제부
  - 마. 국토해양부
  - 바. 통계청
  - 사. 중소기업청

**審査된案件**

- 1. 업무현황보고 ..... 1
  - 가. 기획재정부
  - 나. 교육과학기술부
  - 다. 농림수산식품부
  - 라. 지식경제부
  - 마. 국토해양부
  - 바. 통계청
  - 사. 중소기업청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국회 제2차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차 회의 때 인사를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까.

홍영표 위원님, 지난번에 인사 못 하셨지요?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인사하시지요.

○홍영표 위원 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일자리특위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윤석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윤석용 위원 한나라당의 강동을 윤석용입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나라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현황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교육과학기술부
- 다. 농림수산식품부
- 라. 지식경제부
- 마. 국토해양부

## 바. 통계청 사. 중소기업청

(14시10분)

○**위원장 변재일** 앞으로 더 오시는 위원님들은 별도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입법활동과 6·2 지방선거 등으로 바빠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태여 일자리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이것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누차 논의가 됐지만 현재의 경제정책하에서, 우리의 산업구조하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 또 고용률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나름대로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로 고용이 가지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1년, 금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문 5개 부처와 통계청,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용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을 그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회의 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3월 국회에서 현황보고를 받게 될 13개 부처 이외에 추가보고가 필요한 기관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4월 초에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회의운영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보고를 순차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큰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의 고용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일자리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는 고용 위기에 대처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희망근로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왔으며 일자리 나누기 확산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정부 체제를 구축하여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고용 창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대통령 주재하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노동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용시장 여건은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지난 2월에 전년 동월에 대비하여 12만 5000명에 이르고 민간의 고용도 개선되고 있는 등 고용 회복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높은 청년실업률 수준과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업자 수의 증가 등에서 보듯이 아직은 고용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알선을 강화하고 취업장려수당, 고용

중대세액공제제도 등 한시적 재정·세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선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친화적 재정·세제 지원제도의 수립,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등 수요 측면에서도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실용형 인재의 육성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의 제고 등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 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이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지원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일자리 대책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래 차관보입니다.

류성걸 예산실장입니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입니다.

남진웅 정책조정국장입니다.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주영섭 조세정책관입니다.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차관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해 봐 달라고 지난 주말에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노대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 고용 여건 평가, 고용 정책 방향, 단기적 대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의 고용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경기 개선에 따른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도 하락하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적극적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고용 악화를 완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업 연쇄도산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급감하였던 외환위기 시에 비해 고용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고용 악화 정도가 완만한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번 글로벌 위기 시이고, 밑으로 처져 있는 부분이 외환위기 시입니다. 금번에는 고용 위축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5000명이 증가해서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민간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취업자가 5년여 만에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위쪽에 있는 것이 공공부문 취업자 수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공공부문 취업자는 급격히 하락한 반면, 맨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과 2월에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 증가,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일시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합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

면, '쉬었음' 인구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회복세 지속,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본격화에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확대되고 실업률은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주요 고용지표 관련 개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계층별 고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여성, 청년층, 일용직, 자영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회복속도도 느린 상황입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2009년 2/4분기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때 여성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남성은 2만 4000명이 플러스된 반면 여성은 15만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4/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남성은 취업자 수가 8만 9000명 증가한 반면에 여성은 마이너스 9만 4000명으로 회복기에도 여성의 취업은 좀 더디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운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구직활동 증가로 실업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부진에 따라서 일용직과 자영업주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 증가, 수출의 취업 유발효과 하락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나 사회서비스 등은 진입·투자 제한,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나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력수급 측면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해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되는 반면에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처우 및 근로조건 격차가 상당하고 연공급여체제와 근로형태 제약이 고용 증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이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재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낮은 고용률이 지속되면 총수요의 위축, 성장잠재력 훼손, 빈부격차 확대로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안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대책과 구조적 개선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운용에 있어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희망근로 등 한시적인 정부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재정·세계 지원을 통해 취업 및 채용유인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대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 유연성·안정성 제고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고용 목표는 취업자 증가를 25만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용률은 2009년보다 0.1%p 높은 58.7%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40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0.1%p를 높이려면 약 4만 명의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력을 제고해서 매년 0.1%p 이상 고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위기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 TF, 교육 및 인력양성 TF 등 3개 TF를 통해서 교육·노동·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대책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체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있는 단기적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취업 알선을 강화하고 한시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를 확충하고 취업, 교육훈련, 창업 등 구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고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취업희망자에게는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취업알선성공수당을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희망자에게는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하고 창업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 조달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근로와 구인 유인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빈 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에는

취업장려수당을 본인에게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해외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수준의 세제 지원을 3년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이 약 3000억 원입니다. 이 3000억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 개를 조성할 계획이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점검·평가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500억 원 규모의 교부금을 배분할 때 우대할 계획입니다.

고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고용통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가 고용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조지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표 포괄범위의 적절성, 경기와의 부합 여부, 통계적 유익성 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DB를 활용해서 매월 광역시 및 기초 지자체별로 고용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업정책 및 재정지원·세제 등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 고용기준을 강화하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서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간병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인력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취업직종 등 취업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부실 경영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산업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서 실용형 인재육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부지 내에 기업 연구소 건물을 이전토록 한다든지 대학과 기업 간 클러스터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평가 등을 통해서 대학 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교사임용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부담을 낮추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임금·고용의 유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분배형에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노동운동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 확산 등을 통해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 등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고용중개기관 육성을 위해서 고용지원서비스 위탁 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와 위탁 규모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과 관련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세제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고용 기준을 지원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유턴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 완화기간 동안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의 타 부처 소관 법률 중 구조적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도 금년 중 관련법 제·개정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대상 법률은 아래에 예시한 대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편, 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약사법 변호사법 등이 되겠습니다.

유연근로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취약계층 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보험사업 개편,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부 보고에 앞서서, 강석호 위원님 처음 나오셨지요?

○강석호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강석호 위원 제가 저희 당의 원내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북의 영덕·울진·영양·봉화 출신의 강석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특위에 와서 많이 배우고 독려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김광림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하시고,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 개최되는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국가 고용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식품 분야는 전체 고용인력의 17%가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 외식업체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아 과당경쟁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농식품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농식품 분야 일자리 전략회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농식품, 농어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식품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용 촉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식품 고용촉진센터를 설립하고, 농어업경영체에 인력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 공급 회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12만 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과 산림자원 개발, 공공·직접 일자리 지원,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 신성장동력 및 식품 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적극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전통·발효·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과 신규 업종 발굴·지원 등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말 산업을 종합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산

어촌 관광, 낚시 산업, 농식품·관광 컨설팅 등 유망 서비스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태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방문규 식품유통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양태선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식품 분야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린 다음, 농식품 분야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유망 농식품 산업 육성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분야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 취업자의 약 17.1%가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분야는 농어업 성장 정체, 농어가 인구 감소 등으로 농림어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의 소득 격차, 진입 장벽 등으로 젊은 농어업 후계 인력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고, 농림어업 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투자액 대비 취업 유발 효과는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중개기능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식품 산업은 최근 10년간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제조업 및 외식업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7% 수준으로 고성장 추세에 있는 데 반해 고용의 질적·양적 성장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농어촌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 낙후 등으로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농림어업의 비중 감소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 부문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농업 분야 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에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 시장 창출 노력이 미흡했고, 농어촌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다각화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농어촌 노동력 공급과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한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농식품 고용촉진센터를 농·수협 등 관련 기관에 설치하고, 농식품 인력 공급 회사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농식품 인력 공급 회사에 한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품목·분야별로 특정 기술 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 훈련기관을 알선하고 훈련비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농림수산물 분야에서는 금년도 재정을 통해 농어촌 개발, 산림자원 개발 등의 6대 분야에서 총 12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사업 집행 점검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망 농식품 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분야입니다.

2013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식품기업 145개소와 민간연구소 10개 이상을 유치시킴으로써 2014년까지 38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가공식품 시장 규모를 현재 55.2조 원에서 14년까지 약 8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

해서 기능성식품, 식품기초소재 등 고부가 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김치, 막걸리, 천일염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식품 수출을 현재 31억 불에서 2014년까지 81억 불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식 분야는 가족·생계형 산업구조를 프랜차이즈 등 기업형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랜차이즈 1개 창업 시 평균 41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외식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재료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진출 외식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한식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식의 웰빙식품 이미지의 체계적 확산과 현지화로 신시장 창출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G20, 한국 방문의 해를 한식이 세계로 뻗어가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 관련 유망 서비스 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2014년까지 총 7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의 진입 제한 완화 및 지자체·학교 승마장 설치 확대 등 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승마 대중화 등 말 이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말 사업자, 이용자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 분야입니다.

농어촌 지역 자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4년까지 농어촌 우수 관광명소 100개소를 선정하고, 마을 리더·주민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낚시 인구는 약 570만 명 수준인데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낚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바다 및 민물 낚시터 신규 개설을 확대하고, 낚시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낚시지도자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산업형·도

농 교류형·지역 개발형·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등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농어촌 공동체 회사 보육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공동체 회사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분야 마지막 내용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의 민간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수요에 대응해서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지역개발 컨설팅 업체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존경하는 변재일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 일자리정책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 사정은 아직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최접점에 위치한 저희 부서로서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는 우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들을 조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산학협력의 고용창출 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노동집약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는 신성장동력 추진과 함께 원자력, 플랜트, 항공, 소프트웨어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대한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정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조기에 미래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인력양성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고용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중견 기업 일자리를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식경제부는 그간 우리 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산업경쟁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참석한 저희 지식경제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정재훈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윤상직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기획조정실장 윤상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최근 고용 동향과 평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식경제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고용 동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금년

2월 들어 민간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어려운 고용 상황의 일차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에 있겠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식경제부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의 약화 그리고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산업현장과 학교교육 간 괴리에 따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고용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일자리창출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조기 집행하여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층과 중소기업 간,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 등의 인력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해서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전·플랜트·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을 고용과 연계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정책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식경제부의 일자리사업은 무역, 산업기술 인턴, 퇴직전문가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금년 약 3만 2000명의 고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으로는 청년층부터 퇴직자까지 넓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집단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월 사업의 진행도를 점검 중이며 사업 공고, 사전교육이 완료되는 1/4분기 이후에는 고용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경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의 고용 창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기술대의 산학 협력 모델을 확산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 등 전문인

력 양성산업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방식의 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을 통해서 고학력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고용 사정이 어려운 지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고용보조금을 개편하여 지방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산집법을 개정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방의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브랜드화를 통해서 지역 산업의 일자리 매력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방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위하여 채용박람회도 광역경제권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 고용친화적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패션의류·봉제 등 그간 위축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고부가가치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봉제업의 경우 생산집적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u-헬스, 디자인, 이러닝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모델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프랜차이즈 산업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세·금융 등에서 중소기업 졸업 시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 기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월드 클래스 수준의 3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견기업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의 고용확대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산업의 고용창출 방안입니다.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전문인력의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공기업 정원을 조정하고 예비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특성화대학도 설립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시장 진출을 통해 신규 고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랜트산업의 고용창출 방안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플랜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도 12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해외플랜트 건설현장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플랜트산업 인력을 집중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 플랜트 마케팅 지원과 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플랜트 수주가 우리 경제의 고용 확대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일자리도 늘려가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고임금산업으로 많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계·인증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 지식기반 산업이지만 우수인재의 기피로 고급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해 대학원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취직이 되는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고급 인재를 키우고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주력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경제부의 일자리대책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차례입니다.

오늘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각한 고용문제 해소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만들기 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초·중·고에 전문강사 등을 채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생 및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수태 인재정책실장입니다.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입니다.

곽창신 학술연구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자리만들기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추진 배경 및 현황, 일자리만들기 및 취업지원 확대, 교육제도 개선 및 우수인력 양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 및 현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청년층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전

체 실업률 4.9%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한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불안감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력 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인력 수요에 비해 대졸 인력의 공급 과다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경기 회복 이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구인난·구직난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은 교육이 사회·경제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여 취업자 재교육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과부에서는 심화된 청년실업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과 구조적 고용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및 취업지원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일자리만들기 사업입니다.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과부 차원의 단기적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체 23개 사업에 총 5만 3170명 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월 말 현재 추진현황은 5개 일자리사업에서 1만 4638명의 채용이 완료되어 약 27.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및 연구소 청년인턴 채용사업의 경우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의 경력 형성 및 공공 부문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에 인턴을 채용·지원하는 사업으로 1541명을 계획하여 현재 57.8%의 채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인턴, 시도 교육청 행정인턴, 출연연구기관 인턴연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등 교육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강사 및 보조인력 등으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총 3만 1486명을 계획하여 6860명이 금년도 2월 말 현재 채용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그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영어 수업 시수 확대 등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영어회화 전문인력을 강사로 채용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수업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학습보조 인턴 교사 채용,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련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엄마표 멘토링 사업, 국립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강사 및 보조원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그리고 아래쪽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기술 분야 취업연계형 사업은 교육·훈련, 현장파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에 대비하고 향후 관련 분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주로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2만여 명을 계획하여 현재 3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촉진 프로그램과 교육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들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공계 대졸생 전문기술 연수사업과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등 이공계 미취업자 또는 대졸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해외 경험을 쌓게 하여 취업 준비와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사업,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정보 DB 구축 참여, 산업체 적응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 DB를 확보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교과부 노동부 국방부 등에서 대학취업지원센터, 고용지원

센터,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정보를 입력하고 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DB, 즉 Job Young에서 대상자를 여러 형태로 분류한 후 이를 취업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계형 직업·기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학 취업지원부서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을 확충토록 하고 또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각 대학 취업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지원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취업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중기청 등과 연계하여 대졸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잠재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기재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교육 및 인력양성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3개의 범부처 TF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기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 중장기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중요 의제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 교육 및 인력양성 TF에서 앞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이공계 교육 강화, 우수한 해외 이공계 인력의 복귀·정착 지원

확대 등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및 기업 밀착형 산학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대학-기업 간 클러스트화 추진 방안도 마련하고 대학이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경제 인력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전체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정예화하면서 고품질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토해양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 분야 일자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국토해양부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로 민간 부문의 고용 부진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 23조 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 48조 원도 62%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BTL, BTO 등 민자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 국책사업도 본격 진행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철도, 도로, 공항, 항

만 등 SOC 분야별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급자리지구에서 전체 주택의 25% 수준의 민간주택 택지를 공급하고 택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산단 재생 등 지역산업기반 확충과 기업투자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6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건설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브라질, 리비아 등 해외 철도시장과 DR 콩고의 바나나항 개발사업 등에도 본격 진출하겠습니다.

건설업과 해운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항공, 부동산 산업 등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양자원 개발과 항공정비업 등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토해양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해양 분야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 대책 관련 국토해양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수입니다.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장만석입니다.

정책기획관 윤학배입니다.

주택정책관 이원재입니다.

종합교통정책관 여형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토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용 현황 및 문제점과 일자리 창출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국토해양 분야는 건설업, 운수업에 287만 9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설업은 공공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자 수는 감소세고, 반면 운수업 취업자 수는 08년과 09년 초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회복과 유가안정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운수업은 고용잠재력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로 민간 부문의 고용을 보완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의 기반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에 이어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금년도 국토해양 SOC 예산 23조 3000억원의 66%인 15.4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에 62%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SOC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SOC 투자 방향입니다.

철도는 전국적인 고속·간선 철도망과 대도시권 광역·도시 철도망의 효율적인 구축에 중점을 두고 도로는 도시부 교통 애로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산·광양항에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 거점항만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민간주택의 건설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급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 건설용 택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상한액 산정 시 실제 투입비용을 감안하여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을 활성화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환매조건부 매입과 미분양 펀드·리츠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심 대도시권에서는 KTX의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신규로 5개의 국가산업단지의 착수, 또한 중부 영남권의 내륙물류기지 준공과 부산항 신항의 배후물류단지 등을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의 적극 진출입니다.

해외건설 수주 6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여 해외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자 선정 예정인 브라질 고속철도와 리비아의 메트로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부국인 DR 콩고의 바나나향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적극적인 창출입니다.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사전환경성 평가에 착수하고 시화 조력발전소를 준공함과 아울러 해수에서 리튬의 추출을 위한 시험용 플랜트 건설 등 전력자원의 상용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최첨단 해양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산업화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일류 수준의 항공기술 육성을 위하여 클린 경량 항공기, 중소형 항공기 안전기술 그리고 차세대 항행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플랜트 건설기술자와 해외건설관리자 등을 금년에 7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민간 비행교육훈련원 개원을 통해서 연간 200여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분야의 7개 항공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하여 석사급 전문인력 180명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설계 VE, 벨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설계 VE를 정착시켜 나가고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불황에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등으

로 3차 물류 활용률을 제고하며 또한 저비용 항공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이인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외람되지만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계청의 일자리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통계청장으로서 최대 국정현안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통계 생산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고용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세분된 통계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통계 및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 정책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는 한편 지자체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주기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적 자원이나 직업 능력 개발 등 일자리 만들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통계를 생산하고 확충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 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통계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차장입니다.

문창용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윤수 통계정책국장입니다.  
 김광섭 조사관리국장입니다.  
 정규돈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오병태 사회통계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통계청의 고용통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용동향을 보는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과 고용동향, 고용통계 작성 현황 그리고 향후 고용통계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동향을 보는 주요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지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권고안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 즉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취업자의 정의는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이며 15세 이상의 인구는 군인과 재소자 등이 제외된 인구입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수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실업자는 매월 15일 포함된 1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통계청은 1페이지 하단에 인용된 실업자의 ILO 권고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실업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육아·가사·연로·취업준비 등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노동력 개념과 2009년도 고용의 모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8.6%, 실업률은 3.6%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의 차이와 인구·사회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먼저 산업구조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농림어업 및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농림어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여 다음 농사철까지 대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에서 이탈하면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등 실업자로서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 기준에 부합되는 인구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사회 구조적 요인입니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고령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10.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재취업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청년층의 경우는 기업의 경력자 선호와 구직자의 기대 수준 간 미스 매치(miss match)로 '눈높이 실업'이 늘면서 취업 준비자와 재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낮습니다.

고용동향입니다.

제조업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과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고용률은 58.6%로 하락하는 등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전통산업은 감소하고 지식기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산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는 기업화·대형화에 따른 가족·생계형 중심의 자영업자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고용사정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수출회복세 등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농림어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농림어업 증가 확대로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정부일자리 사업에 따른 관심이 늘어나고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2010년 1·2월 들어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노동력의 공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고용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3만 2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청·노년층, 비임금근로자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규모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부

가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고용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17만 5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시도와 시·군별 상세한 고용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대·중·소 사업 규모별 취업자 수를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과 시산 작업도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수요정책에 따라 지역별 고용조사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조사항목의 추가·보완도 추진하여 수요자 니즈(needs)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 관련 정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통계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존경하는 변재일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 만들기 관련 저희 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기업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중 기획조정관입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서승원 창업벤처국장입니다.

강시우 경영지원국장입니다.

김태일 기술혁신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0년 일자리 만들기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과 고용현황,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빈 일자리 충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투자·창업 등의 실물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체의 생산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창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물 분야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빈 일자리 충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성공 벤처기업인의 기업가정신 특강 등으로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맞춤형 창업 교육을 확대하여 예비 창업자의 저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등 유망 분야의 1인 창조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1만 명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등에 10개의 '앱(App) 창작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공공정보 공개와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등급분류심의 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2012년까지 3조 5000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연계형 투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창업기업에 맞춤형으로 특화된 입지와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정책자금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분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게 공장등록증 발급

특례를 적용하고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여 빈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정보의 불일치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취업대책반을 운영하며,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환경과 근로여건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현장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전문계고와 대학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하여 중견기술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1000개의 녹색기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금형·주조 업종 등의 기업을 고용 흡수력이 큰 제조기반기술 전문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수출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하는 한편 2013년까지 1만 개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개선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말씀하시지요.

○윤석용 위원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들 일자리 창출에 나서시는 정부당국께 감사를 드립니다마

는 이런 위원회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관련 간부들이나 장관들이 국회에 쓸데없이 많이 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어느 청 같은 데서는 통계정보국 국장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실력 있는 장관님은 한 서너명만 대동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오시고 해당 전문가나 진짜 관련 실·국장님들만 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를 안 하도록 방지하고 혹시 남은 인력이 있으시면 타 부처나 아니면 진짜 일손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에 보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부명단을 보니까 어느 부처는 상세하게 출신 지역까지 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 친절한 표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식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출신 지역 알아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친절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첫날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처의 간부가 누가 있다고 인사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핵심 간부들을 다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보고하신 5개 부처하고 2개 청 통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일단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질의하시고서 추가 보충질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발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의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서해안 쪽의 여러 가지 사고도 빨리 생존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농수산식품부 장관님도 새벽에 장례는 잘 치렀습니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강석호 위원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님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지난 2월 달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한 고용 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률적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상 세제 공제금액은 한 얼마쯤 예상합니까, 이 법률안에 의한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은 4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좋습니다, 세액 공제금액이 45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히 기업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을 통하는 여러 가지 세액 감소를 기업에서는 주장을 하고 또 정부에서는 세금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재정적 부분도 우려를 하는데 만약 이 경우에 의해서 상시근로자를 중소기업 내에서 증가시킨다면 1인당 300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하되 이런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투자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와 또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어떤 법인세 세수 증가 이런 부분으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점 자체가 고용의 증대에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증대가 매출과 얼마큼 연계가 되고 그것이 또 세수와 얼마큼 연계될지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계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다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것이 고용의 증대를 갖고 올 때 그 중에서 이른바 사중손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취업자 증가를 사중손실을 다 제외해 놓고 나면 한 1만 명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한번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일단 고용 증대 1만 명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것을 서로 기업과 정부의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2월 달에 10%에서 7%로 대기업과 같이 낮추어졌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줄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원래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3%와 10% 양쪽을 선택적 세율을 적용해서 중소기업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멸되는 부분을 7%로 다시 되살려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방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같이 10%를 하다가 같이 또 3%를 내려버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기업과 좀 차별화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임시세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추가 연장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봐 가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중소기업청 청장님, 지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강석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합시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즈 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이 비즈 인포메이션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닌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얘기는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이트를 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일부 정책 제외하고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의 전체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조희가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지금 복잡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때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즈 인포메이션의 36개에 이르는 여러 대외 정보망들이 연계만 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보망들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고 수요자들이 좀 알 수 있게 간략히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 장관님!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제1차관입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한번 하셨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3월 18일 날, 그래서 5대 핵심 전략 9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작년 말 기업들이 은행에 저축한 현금성 자산이 약 211조 원, 우리나라 GDP의 21%에 이르고 있고 2008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약 177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약 38조 원이 2009년도에 늘어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대기업이 자꾸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부는 엄청나게 기업 환경을 좋게 하는 많은 정책을 매일같이 쏟아내 주고 있는데도 현재 이런 실정이

왜 그런 실정이에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과 저희가 접촉을 해 보면 아직까지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이라든가 그리스의 문제라든가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상황들이 불확실하니까 기업에 자금을 많이 유보를 해서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대기업에는 많은 부분들에 재원이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돌아갈, 아까도 그랬잖아요. 임시투자세액 공제해서 대기업과 똑같이 중소기업에게 10%에서 7%로 같이 낮춘다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고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차별화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의 고용 창출과 R&D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정기예금을 한 것이 약 85%에 이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아무리 공공 일자리, 아무리 많은 일을 창출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기업이 순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 정책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민주당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4대 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고 또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22조 원의 4대 강 사업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 34만 개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으셨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문제점 지적하는데 그 뒤로 수정을 하셨습니까, 일자리 개수를?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4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개수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34만 개 그대로 주장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일단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게 2006년 산업연관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서 10억 원당에 17.3명이라는 그 기준으로 계산하신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할 때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건설투자에 1조 원당 일자리는 2149명에서 3843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4대 강 사업에 적용하면 4만 7000개에서 8만 5000개 정도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으십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한은에서 얻은 산업별 취업 연관 계수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게 2006년도 연관표고요, 그리고 해마다 취업유발 효과가 급감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2007년도는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2007년도뿐이 아니라 지금 그 뒤로도 3년이 지났습니다. 급감하는 상황에서 2006년도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비 규모당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현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은 단순산술적인 계산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 봐라, 사람이 있나 와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낙동강의 상주보가 111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1일 작업 현황을 봤습니다. 공구가 세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3개 공구 전체 합해도 9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97명이면 내일은 200명 모래는 300명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공정별로 또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물론입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빨리 달라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는 4대 강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정확히 몇 개 정도인지를 밝혀야 되고 그 사업 내용과 규모,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그런 고용영향평가 모델을 도입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SOC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저희들이 지금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별로 계산하기보다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영희 위원** 전 국민의 관심이 이 4대 강 예산이었고요, 4대 강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나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찬성을 하고 있는 일부 의견은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 창출의 통계 수치가 엉망진창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내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 차관계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업자 수 그리고 고용 여건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기준 ILO 권고 기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아까 통계청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제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런데 항상 이 고용 통계에 대해서 실업자 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받아오셨지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체감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 그런 것 많이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예만 들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0.03인데 고용률은 58.8이거든요. 우리 비슷합니다, 고용률이 58.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6입니다. 이 체감 온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점을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료를 보면 취업애로계층이라는 그런 통계를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통계인지, 그 자료에 보면 2009년도의 취업애로계층이 182만 3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 질의 끝나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취업애로계층이라는 그 통계를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에 포함시켜서 발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 부분은 저희가 취업애로계층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과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미국이 완벽한 정책을 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현재 실업률을 보조지표를 U1에서 U6까지 이렇게 6단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4단계로라도 나누어서 1단계는 현재 정부 통계인 4주간 실업자, 2단계는 1단계 플러스 취업준비생, 3단계는 2단계 플러스 구직단념자, 4단계는 3단계

플러스 쉬었음 인구로 분류하고 정부가 말하는 취업애로계층도 포함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업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취업률을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취업애로계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항간에서 실업률 외에 사실상 실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한 숫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분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의사능력이 있는 분들을 서베이를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해 보고 또 이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36시간 정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이른바 불완전취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더 일을 할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182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보조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정식 통계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관계부처하고 전문가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나오는 결과를 봐 가지고 과연 이 지표를 사용해도 좋은 것인지 등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통계청장님이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고 또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통계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는데 굉장히 좋은 입장을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실업이나 정부 고용 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배은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차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010년 고용 취업자 증가를 25만 명 플러스 알파로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말씀하실 때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십이만 몇천 명 증가를 올해 목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게 수치가 맞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배은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반 정도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신다는 것 맞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 기준은 우리가 12만 9000명 얘기한 것은 우리 예산이 유발하는 취업계수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실질……

○**배은희 위원**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 전체 취업자 수의 17.1%가 농식품 분야에 종사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취업자 수의 17% 정도를 커버하는 데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의 반 정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정부에서 투자 계획으로 잡혀 있는 재정지원금액이요, 그 금액을 취업유발계수를 산정해서……

○**배은희 위원** 아니, 가능하십니까?

이 수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가능합니다.

○**배은희 위원** 기재부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수치를 보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잘 잡혔는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보고한 것을 보니까 벌써 20만 명이 되거든요, 오늘 보고한 부처 한 3개만 합쳐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게 이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맞춰 봐야 알겠습니까. 저희가 25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있던 일자리보다도 신규로 그만큼 더 창출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농림수산식품

부도 신규로 더 창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에,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아니, 신규가 아니고요.

예산이 작년 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이 있는데 추가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으로 하는 일자리는 2만 9000개입니다.

○**배은희 위원** 2만 9000개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보고서에 좀 정확히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수치가 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이 안 따라준다, 이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크나큰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볼 때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할 때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성폭력범죄가 있고 또 학교폭력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전문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인력 양성하는 예산을 먼저 우선 배정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안전망도 더 확충하고 그럴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하실 때 예산 하나하나마다 그런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과지표에 다 넣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예산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 예산마다 좀 틀리지요, 성과지표 항목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른바 고용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3분의 1 정도밖에 적용하지 못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고용효과를 앞으로 예산이나 정책에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성격 자체가 그것이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성격 자체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고용영향평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잡 미스매치 문제도 굉장히 큰데요. 일자리는 있는데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다 마음에 안 드는 일자리를 안 간다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연봉 2000 이상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못 구하고 또 구직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은 가면 이것 금방 망할 회사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이런 잡 미스매치만 해결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정책이 아주 실효성 있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참 잘한다 싶은 게 기업은행에서 조선일보와 같이 일자리 맺어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이라든지 얼마나 이 기업이 작지만 탄탄한가 이런 것을 구직자들한테 잘 매치를 해 줘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취업박람회 이런 것 말고 진짜 한 사람이 기업도 알고 구직자들의 요구도 알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된 것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미스매치 문제 중에서 정보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하는 2010고용안정계획에 따르면 지금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잘되게 확충하고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잘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것 다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은희 위원** 그것 있으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차관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해서 설계VE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VE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이것은 벨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경제성검토를 강화해서……

○**배은희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절감해서 좋은 일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배은희 위원** 좋은 일자리로 어떻게 돌립니까? 이게 정부 예산입니까, 절약되는 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정부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배은희 위원** 아니, 절약된 예산이 정부 예산입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배은희 위원** 절약되는 것 일자리로 돌린다는 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한 것만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배은희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분리발주 없애시겠다는 거지요? 지경부 차관님!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예.

○**배은희 위원** 지경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분리발주 확대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벨류 엔지니어링하고 분리발주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건설선진화방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배은희 위원** 거기에서 분리발주를 여러 가지 이유가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안 하게, 그런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경부에서 가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또 소프트웨어 부분의 대개가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막겠다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양부처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 이게…… 지경부에서 이게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다음에 지식서비스산업의 분야를 강화하는 거다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반대로 나간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기재부에서 좀…… 어디서 조절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두 부처에서 차관님들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참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그 계획 다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지경부 차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전체적으로 정부내에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분리발주를 해서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소프트웨어 쪽에서 했는데 그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큰 방향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배은희 위원** 그러면 정부부처 간 잘 좀 협조를 하십시오.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위원님, 저희들은 금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분리발주를 8700억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님,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 이

후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7만 3000개입니다. 원래 대선 공약에서 30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대선 공약 때 말씀하신 대로 300만 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겠다 하는 공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현재 어떻게 조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다만 저희는 일단 경제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일단 25만 플러스 알파로 해 놓고 앞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봐 가면서 계속 고용에 정책의 중심을 뒀 가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숫자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다 고용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정부가 올해 2010년에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8년 2009년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말 이 실업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심각성을 당시에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던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이제 와서 올해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 문제에 대해서 통계상 느끼는 것보다…… 아까 취업애로계층으로 해서 한 182만 명 말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하면 약 362만 명이고요, 이것을 감안한 실업률을 보면 거의 15%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의 격차 문제를 해소할 보조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취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실업이 15%라는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고 있는 실업률 자체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ILO 통계기 때문에 그것은 ILO 통계에 맞추어서 한 실업률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항간에서 다니고 있는 362만 이런 정도의 숫자 같은 것을 보면 정말로 취업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취업 기회가 주어져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구직단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중복되는 숫자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숫자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의 실업률 외에도 불완전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조지표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아무튼 취업준비자, 이게 사실 각종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그 외에도 사실 여기에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구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려를 한 보조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2017년까지 앞으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고용을 보면 1998년부터 10년 동안 약 60만 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 고용도 오히려 한 10만 명 정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10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세 혜택을 주면서 또 대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경련에서 발표한 게 텅 서비스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감세 혜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300만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해하기는 매년 한 40만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정확할지는 결국 지나봐야지 알겠습니

다마는 다만 두 가지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성장이 커지면 그 성장이 결국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 되었던 모든 연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지만 고용의 기반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것은 분명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고용투자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모든 제도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은 확실하게 중소기업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 다만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는 것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자기네가 고용하지 않더라도 결국 성장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고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났지만 대기업에 대한 사내유보금 과다 문제나 대기업 감세 혜택 이것이 어떤 투자와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혜택을 대기업에 베풀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나라당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이 특위 활동이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일자리특위를 지원하는 TF를 소수 인원으로 구성케 하고 그 TF랑 일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애로 사항이 되어 있는 법, 법 외 제도, 또 재정 지원의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우리 특위가 그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필요한 레커멘데이션(recommendation)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회의를 마치고 정부 측이랑 협의하셔서 많은 인원보다는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소수의 관련 부처의 TF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자료요구 형식으로 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회의자료, 그다음 TF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송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실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루 정도……

○김성식 위원 회의 마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여유 주시면 바로 작성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예, 회의 마치고. 지금까지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회의 마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 정부의 정책은 크게 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 전후로 지금까지 구조적인 고용 문제에 대한 원인,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처별로 단기 대책도 있지만 구조적인 진단이 파편적으로 있는데 조금씩 포인트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해서 각 부처에서 구조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우리 고용이 악화된 원인에 대한 진단 자료를 받고 또 기재부가 한번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저희가 일단 고용전략회의에도 한번 내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마는 좀 더 한번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머리 중심으로, 어디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애로 요인이다, 보틀넥이다 하는 것을 일머리 중심으로 1-1, 2-1 이런 식으로 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가 갖는 한계가 고용과 연관해서는 서로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를 함께 진작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거시적 환경을 조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는 기재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 논의에 어떤 부분이 이견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일자리특위에 상임위별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고용이 증가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1인 기업, 창의기업 쪽,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쪽 이쪽이 민간 부분에서 고용 창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공정거래 차원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부품을 개발한 한 업체는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자기에게만 소싱을 하도록 강요받는 사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대기업에 그것을 소싱하면 끊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데 제약 요인으로 눈에 띄는 것이고, 흔히 말해서 스마트폰 경제 이전 시절, 즉 망 사업자들이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를 만들고 하면 그것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홀라당 사거나 아니면 끊거나 이런 관행들이 많아서 앞으로 창의기업과 중견기업이 커 나가는 데 많은 보틀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상 어떠한 제도개편이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재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교과부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교과부는 현재 치의학전문대학과 의학전문대학이 생기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이공계의 주요 인력들이 얼마나 그 시험에 매달리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공계 인력 수급에 얼마나 장애를 주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외국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실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실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교과부 시각에서도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경부 입장에서는 수요 쪽에서 고급 엔지니어나 리서처를 구하려 하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시험에 매달리면서 생기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교과부는 아울러, 주요 대학들이 경영대도 있고 법대도 있고 이공대도 있고 공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대학의 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내에 실질적으로 민간 차원의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학제 간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경부는 이런 쪽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관된 R&D 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경부 시각에서도 이와 관련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습니다. 각 대학들이 시민에게 자기 교육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교육을 개방하면 인생 3모작 시대에 30대에 직장을 바꾸고 또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자영업을 하고자 할 때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 문제를 대학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고 그것을 위한 교과부 입장은 뭐가 있는 것인지 정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아까 4대 강 사업에 관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모두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정리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는 노동패널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업률이 얼마나 이 문제는 통계를 보완하면 되는 문제고, 지난 한 10년간 보면 구조화된, 낙후된 업종 혹은 낙후된 저소득 이 부분이 구조화해서 돌아갑니다, 불완전 실업층과 연관해서.

그러려면 노동패널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이 노동패널 자료를 잘 내놓지도 않고 통계청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노동패널조사를 통해서 트래킹을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고용되었다가 실업되었다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재취업되었고 하는 것이 트레이싱(tracing)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자료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통계청에서는 패널조사와 연관되어서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낼 것이고요. 오늘 제가 구두로 자료 요구한 것이나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정도 대충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김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광주 북구를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부처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정작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차관께 묻겠습니다.

올 경제성장률은 얼마 정도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취업자 증가 목표는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는 경제성장을 한 5% 보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 목표는 원래 20만에서 시작했다가 저희가 새로운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합쳐 가지고 25만 플러스 알파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오늘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351만 명이에요. 거기에 25만 명 늘리겠다는 것은 취업자 증가 목표를 1% 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0.1%입니다.

○김재균 위원 예.

이렇게 따지면 일자리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목표치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이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경기 후행성이기 때문에 금년도 일자리는 사실 작년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그러니까 내년쯤의 일자리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단순히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짧게 답변하시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김재균 위원 어쨌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논리가 뭐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줘야 한다고 법인세는 깎아 주고 규제도 풀어 주고 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률 성적은 괜찮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장률에만 집착하다가 일자리 사정은 결국은 골병이 들고 말았어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3.4%였던 실업률, 올 2월 들어서 4.9%입니다. 고용률은 59.1%에서 56.6%로 떨어졌어요. 불과 2년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기재부는 고용률 60% 회복을 향후 10년간의 장기 목표로 이번 보고에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갈증과 요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모자란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도 올라가고 취업률도 일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위기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성적은 어땠느냐와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성장 대신 일자리 만들기를 택하고 있어요.

제가 죽 그 내용을 보니까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의 고용률은 4년 동안 5.2%와 4.3%, 4.1% 올랐어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독일이 1.1%, 네덜란드가 2%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성장률보다 고용률이 훨씬 높아요.

이들 나라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률 성장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

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각 나라의 케이스를 갖다 다 보기 전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죽 보고서 얻은 결론 중의 하나는 이른바 내수 산업, 서비스 산업 부분을 갖다가 육성해야지만 같은 성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서비스 산업 육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나라는 외면적 성장보다는 국민의 일자리 만들기를 우선하는 적극적 정책 시행의 결과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곧 일자리 프렌들리라고 말했는데, 본 위원은 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일자리 예산 2조 8000억 원을 포함한 5조 5000억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두 가지로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용이라는 것이 결국 크건 작건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친다면 당연히 일자리 프렌들리는 기업 프렌들리랑 같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5% 정도 성장을 합니다. 다만 고용의 후행성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고용의 후행성을 감안해 보고 금년에 5% 큰다고 감안해 볼 때 금년도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가재정법상 갖고 있는 추경 요건에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추경하기에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호들갑 떨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 강 사업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일자리 만들자는 추경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정부의 상황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특위가 백날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도 거의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시다마는…… 시간이 다 됐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봐도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은 21.3%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3.8%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됐습니다. OECD 수준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을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12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좌우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규제를 갖다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조금 전에 4대 강 이야기도 나왔습시다마는 그런 점에서 토목 대신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 재정 투입도 지금의 토목건설 사업을 중단시켜서라도 사회 복지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 분야를 반드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또 균형 있게 인프라라든지, 특히 어떤 환경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 국가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문제 같은 것은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예산을 갖다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 부분은 별도의 논쟁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 또 시간이 되면 통계청하고 농림식품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차관님, 일자리는 어차피 이게 가

장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성장이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게 보면 과거에는 1% 성장할 때마다 7만~8만 개씩 일자리가 생기고 2000년도 언저리에 들어오면서는 이게 한 5만 개 밑으로 확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김광림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년에 5% 성장하면서 25만 개 늘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기본적으로 5%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첫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요, 성장률이 한 6% 훨씬 넘어가지 갈 거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메릴린치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김광림 위원 메릴린치하고 일본계 쪽에서도 보면 6.8%……

국내의 KDI 쪽에도 5.5% 전망을 3월 24일 날 내놨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김광림 위원 정부가 발표한 5% 성장을 4월 국회가 되고 하면 조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으로 봐서 4월 국회까지는 전망이 별로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월 숫자하고 2월 숫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3월 숫자가 4월 국회 정도까지 맞춰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 4월 국회나 상당 기간 동안은 5% 성장으로 그대로 간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대외 부분에서 작년엔 427억 불의 흑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김광림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50억 불 정도 흑자로,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렸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서도 5% 성장하면서 25만

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에서 그 이상으로 확 키워 줘야 되는데 내수 부분의 대책……

오늘 제가 본 의원 발의로 ‘지방의 9만 3000채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차등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작년에 했던 자동차 교체 시에 세금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일자리 효과도 있었고 투자 효과도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거 뭐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25만 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고려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자동차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럴 해저드를 많이 줄여가면서 지방 내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김광림 위원** 예, 그거는 철저히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투자 촉진시키고 일자리 만들어 낼……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는 그 부분은 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가……

**○김광림 위원** 서비스 쪽……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은 우리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은 우선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과 지방정부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보면,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지자체에 내려가 보면 모르고 있어요. 일자리 대책이 각 부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기초자치단체장들 전부 모시고 하기는 힘들어도 좀 이분들을 모셔 가지고 전체 일자리 체계, 일자리 대책의 열개·구조·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모시는 게 힘들다고 하면요 인터넷에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각 부처에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다. 이런 대책이 있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처에서 좀 이렇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찾아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는 뭐가 있고 농림부에는 뭐가 있고 기재부에는 뭐가 있고 하는 것을 전부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통계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에……

청장님!

**○통계청장 이인실** 예.

**○김광림 위원** 우리 실업통계가 자칫 보면, ILO가 다르게 하고 EU가 다르게 하고 미국이 다르게 하고 일본이 다르게 한국이 다르게 실업통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오늘 여기 1페이지에도 보면 각 국제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이 같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김광림 위원** 일주일에 돈 받고 한 시간 일하면 이거 취업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기준이 같기 때문에 괜찮은데, 감으로 올 때는 말입니다. 취업이라고 하면 직장에 취업해 가지고 월급 받는 거 생각하지, 일주일에 한 시간씩 돈 받고 일하는 게 취업이라는 생각이…… 감이 멀거든요. 그런 오해에서부터 사실상 실업자 400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작년에

‘89만이 실업자였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또 해명하기 위해 가지고 182만 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면서 ‘취업애로계층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미국의 U1부터 U6까지…… 그거는 발표는 하지만 그것은 고용 보조지표입니다, 그렇지요? 보조지표 하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취업애로계층이라 해서 182만 명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계속 해서 보조지표로 발표하실 수 있겠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취업애로계층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적 관심 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아직까지 통계로서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서 조금 더 추이 여부를 좀 보면서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1분 정도 더……

이게 1월 21일 날 대통령 모시고 하는 대책회의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 차관님, 앞으로 취업애로계층이게 전체적인 사실상 실업자 400만 명 설명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 고용 보조지표로는 발표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이 검증만 되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지표로 쓰는 거하고 정식으로 발표해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져 보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예.

국토해양부에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게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회 열릴 때마다 토목에는 이게 취업유발계수가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배도 하고 마루도 깔고 찬장도 달고 신발장도 달기 때문에 고용유발계수가 높는데 기계 쓰는 토목 쪽은 그렇지 않다, 또 4대 강이 되니까 4대 강 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목 쪽하고 주택산업 연관 효과 표 보

고 그대로 좀 이렇게 해서…… 숫자만 제시하지 말고 사례를 좀 넣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김광림 위원** 마지막으로 농림부의 장 장관님, 아까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말산업육성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이쪽을 키워서 고용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게 금년도의 중점 통과 법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중점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 저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제가 금년 내에 정부가 제출할 법안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 본 위원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법안 자체를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수질환경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민물낚시터를 2014년까지 내수면에 360개소, 유어장에 70개 신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2014년도까지 하겠다 하면 2011·2012·2013 연도별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이것도 법제화도 하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김광림 위원** 이것도 같이 연도별 계획을…… 특별히 저는, 댐도 많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기재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의 악화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제 일자리의 양이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 생각에 당연

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원·하청 관계에서 부당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좀 있느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다만 수치적으로 저희 부처에서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다른 부처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다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홍희덕 위원** 자료가 지금 없다면 관련 자료를 조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의료채권 발행 등의 의료민영화가 이게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고용 확대와 연결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고용 창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의료채권이라든지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개방 법인을 만드는 것은 의료민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의료의 공공 보장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투자개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DI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각각 연구결과가 있는데 보다 더 보수적으로 했던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명에서 6만 명까지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 개방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의료 개방을 어떤 뜻에서 쓰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희덕 위원** 민영화, 민영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지금……

○**홍희덕 위원** 늘상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요, 투자개방 법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부분에 일반인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건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민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에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합시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과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지, 또 노동조합이 고용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게 무슨 잘못됐는가……

또 보호가 과하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과보호 정도라기보다도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국제적인 기구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구체적인 그런 것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고용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일자리특위가 열린 이유 또한 고용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이 과보호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일자리특위의 목적은 아마 고용을 창출하고 더 확대하자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 보다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생각하고 치면 국제적인 논의의 합의점은 고용시장이 유연할수록 고용이 보다 많이 창출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차관님, 고용시장 유연화라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차관님만 갖고 있는 통계가 아니고 저희가 노동부를 통해서 국제기구 ILO나 이런 곳에서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고용 유연화가 잘돼 있는 곳도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그런 보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분배형 노동운동에서 일자리창출형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분배형 노동운동 또 일자리창출형 노동운동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차관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명확한 학술적 정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처음 출발점이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열악한 노동력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립형이 주가 됐다고 치면 지금처럼 점점 산업이 지식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리고 국제 경쟁이 과열화되는 과정에서……

○**홍희덕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보다 협력형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협력형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재부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지도에 나서는 것 아니냐,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이런 발상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를 역대 정권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동운동의 전환 여건을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자주적으로 노사 간에 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자주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처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9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기실업자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서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장기실업자의 규모나 최근 추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최근에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지경부 장관님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차관입니다.

○**홍희덕 위원** 예, 지경부 차관님.

업무보고에 보면 미래전략산업 고용창출 확대 방안으로 원전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공기업 정원 조정, 인턴제도를 통한 예비 인력 풀 확보 등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한국전력기술과 같은 곳은 인력의 10~15%를 구조조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한 한전KPS의 경우도 고급정비인력이 2012년까지 약 235명이 퇴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정원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기재부가 주도하는 공기업의 일률적인 구조조정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목표가 이게 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전 수출한다든가 원전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고 거기의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어쨌든 공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오히려 원전산업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오늘 각 부처의 보고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도 내셨고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0.2% 성장을, 허 차관님 0.2%가 성장이 되면 고용창출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작년에는 0.2% 성장에서 약 7만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안호대 위원** 감소가 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안호대 위원** 금년도에는 5% 정도로 성장한다면 25만 플러스 알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안호대 위원**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실정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현실적으로. 또 반대로 3D업종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이 되면 3D업종에도 선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한 82% 내외가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안호대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고서 제가 3D 업종에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주유소에 주유 주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대부분 다 외국인들입니다. 국내 아주머니들 구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분들 한 달에 한 120만 원 내외씩 받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야단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식 전환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식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부모님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교육부 1차관님 오셨으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의식 전환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취업을 안 하게 되고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할 때는 임시적이라도 좀 가서 근무를 하고, 경제성장이 5%, 금년과 같이 5%, 6% 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희망하는, 선호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고요 가정적으로도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국가적으로도 범국가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내외 되지요, 허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외국인 다 합쳐서 한 10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호대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안호대 위원** 이런 문제를 외국인만 그 부분을 채워질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국내에 있는 분들도 그 어려운 것을 일시적으로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대학에 보면 지금 중국인 대학생이 한 6만 명…… 1차관님, 한 6만 명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안호대 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돌아갈 때는 욕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라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학교에 열심히 다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돈 벌이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하고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요. 또 자기가 가서 돈 벌지만 돌아갈 때는 학교에 욕을 하게 되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욕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보통, 지금 자료 보니까 5학년, 6학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수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4학년 말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왜 5학년, 6학년 가느냐, 다 취업 문제입니다. 취업 문제인데 왜 졸업예정자하고 졸업자하고 차이가 있는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졸업예정자를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고정된, 경직된 관념이 아닌가 이것도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차관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을 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5학년, 6학년 자꾸 수학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요 국가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

인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낭비지요. 4학년 말에 졸업하고, 4학년 말에 졸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5학년, 6학년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F학점 처리해 달라고 교수에게 요구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의 일환이다…… 대학졸업예정자라는, 대학졸업자의 편견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50~55세까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준고령층이거든요, 고용 측에서 보면. 그다음에 55~6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고령층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노인층이 되는데요.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 50세 이상 되면 준고령층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는 견지는요 피크타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이 어렵고 또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피크타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여유 있는 분을 젊은 층들에게 취업 공간도 넓혀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는 얘기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 입장에서 봐도 마이너스가 절대 아닐 겁니다. 물론 조합이 있겠지요. 조합이 있겠지만 이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조합에서도 결사적으로 반대할 사항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학력층에 있는 여성분들이요 사실상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취업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역할도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원적으로는 의식 전환하는 것이, 범국민적으로 부처에서부터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윤석용입니다.

통계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통계청장 이인실 예.

○윤석용 위원 지난 2월 달 발표에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16만 9000명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아까도 거듭 말했습시다마는 이게 ILO 기준안에 따른 것이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국민들의 체감은 사실 이보다 좀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구직단념자 또한 취업준비생, 쉬는 사람 또한 18시간 미만 근로자’ 이것도 사실 실업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안 때문에 발표가 좀 다른 것도 사실이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그런데요, 그 부분은 약간 말씀드릴 게 있는 것이 말씀하신 ‘쉬었음’이나 아니면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자기가 취업 의사도 없고 실제로 취업 가능성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야지 그 숫자는 너무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국가에게 부담이 취업 의욕이 있는 사람이 더 됩니까? 취업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그런 개념이 아까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관심 대상인 취업 의사도 있고 또 취업 능력도 있는 분을 그 중에서 가려낸 것이 아까 말한 취업애로계층 개념입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단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구하다가 구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실질 국민들도 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사실 계속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장 이인실** 예.

○**윤석용 위원**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겠습니까? 물론 실직자들이 제일 고민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저임금에 있는 비정규직 또한 저소득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들도 제대로 좀 내야 되는데 이렇게 악순환하다가 이 사람이 질병이라든지 장애를 입으면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근로를 포기해 버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또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고용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파악은 가능합니다.

○**윤석용 위원** 파악이 돼요?

○**통계청장 이인실** 아니, 다는…… 다라고 말씀……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피고용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다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용 위원** 주관적인 통계도 문제지만 이렇게 사실은 국민들 생활과 동떨어지는 통계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별 고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시나 광역 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앞으로?

○**통계청장 이인실** 시·군·구별까지입니다.

○**윤석용 위원** 전국이 다 됩니까, 앞으로?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우리 강동구 경우에는 인구가 한 48만, 50만 명 됩니다. 강남권에 속해 가지고 조사가 사실 따로 통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계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무적인데요?

○**통계청장 이인실** 아, 구별까지는 아니고요.

○**윤석용 위원** 그렇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러나 지금 지자체가……

○**윤석용 위원** 그래서 구도 구 나뉘고 군도 군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 군도 있고, 구도 50만이 넘는 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50만이 넘는 구도 자체적으로 통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남권

에 속해 가지고 강남권의 영향력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영향력으로 하고 이렇게 통계가 같이 통일돼 버리면 지역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좀 세부적으로 하고 이런 부정확한 추정치로써 정책 입안을 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것은 사실 믿고 싶습니다.

농수산부장관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부에서는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 앞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 노동부에서의 발표를 보면 패스트푸드나 일반 음식점에 근무하는 청소년들, 18세 미만 애들이 근무를 하다가 노동법에 연루되고 하는 것으로 보고받으셨는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윤석용 위원** 이것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외식산업을 발전시킨다고 업체들은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발전시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외식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또 제대로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근로자 권리 보호 문제도 또 애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등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하나의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회에 반항심리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도 안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단속도 하고 제대로 업주들, 약덕 업주들은 처벌도 같이 하도록 하고 노동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가 부탁하는데 도시에서는 사실 유희 노동력이 많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시골에는 사실 노동력이 없어서 농사

를 못 짓고 과일이 다 익어도 따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윤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 여쭙 보겠습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전에는 한 10만 명, 요새는 한 5만 명 노동이 생긴다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아시다시피 그전의 성장은 저희가 70년대 같은 경우는, 특히 60년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팔이라든지 고용집약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라든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고용 창출력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서비스 대비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률이 우리는 3.6%밖에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외국에는, 미국에는 12.5%, 영국에는 12.4%로 10% 정도 내외인데 G20 정상회담하는 국가로서 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10억을 투자하면 제조업에 6.6명, 서비스업에는 12.6명……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2배 됩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술 수치가 금방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여러 번 발표도 하고 작년에도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을 해 왔고 금년에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용 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과감한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제가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변재일 추가질의 있을 겁니다.

○정희수 위원 아, 본질의에서 말이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 차관께서 고용 목표를 25만 플러스 알파로 하셨는데, 5% 성장 이해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정희수 위원 교과부 차관, 2년제에서 매년 몇 명 졸업하지요, 연간?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연간……

○정희수 위원 한 60만 명,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것 목표를 25만 플러스 알파 해도 괜찮습니까?

기재부 차관?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정희수 위원 매년 60만 명 전문대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25만 플러스 알파 해서 그 차액은 누가 메우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학원 진학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5만 정도가 일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25만 플러스 알파란 것은 최종적인 숫자가 되고 중간에 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가 된 결과가 25만 플러스 알파 하고 일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경활인구로도 가고 일부는 실업으로 갑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업 문제는 이렇게만 되면, 매년 25만 플러스 알파가 되면 걱정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아닙니다. 앞으로도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저희 업종을 조금씩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정희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만들기 갖고 이것 한가하게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희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부가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나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통계지표에도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그 갭을 메워주는 브리지 역할입니다.

○**정희수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올해, 금년도에 아마 한 3조 5000억인가 잡았는데 목표치를 보게 되면 1인당 한 52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열악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지난해에는 4조 7000억을 투자를 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수조 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엑시트 폴리시(exit policy)랑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항상 정부 분의 한 40만 정도를 고용하다가, 창출하다가 작년에 80만까지 갔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80만까지 갔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지금 이미 58만으로 줄여 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이후로 가면서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나갈 계획입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 한 530만~5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자영업자가 한 사람씩 더 고용하게 한다면 500만이 늘어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가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 숫자를 말씀하시면 자영업자가 외국은 과연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가 외국의 2배가 됩니다, OECD 평균……

○**정희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2배고 몇 배고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으로 갖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브리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이 앞장서서 그 환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얘기가 포인트이고 지금 체감 경기, 통계 수치상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발표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 어떤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자꾸 문을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뭐가 문제인지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고서 자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자료가 부실해.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이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사실 생산적인 일자리 만들기가 돼야지 정부 돈 먼저 보면 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작년에 한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디자인할 때는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솔직하게 좀 안 된 얘기지만 내가 이 자료를 보면 10년 전에 정부가 그때 했던 자료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차별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여.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 기재부 차관, 이것 뭐 육성한다고 하긴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119개 사를 하고 중견에서 대기업 28개 사 이것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또 하나 맨 밑에 ‘향후 추진’ 보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겠다, 물론 내가 이해는 합니다 마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이러한 중견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물론 연관 파급효과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뭔가가 잘못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고 중견기업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알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통계청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기에 배석하도록 했는데 이유는 앞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가 따로따로 돌아.

그래서 아까 취약계층 애로 이 부분도 보조지표로, 설명할 때 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기재부 차관, 이것 언제부터 발표하기 시작할 거예요? 통계청장은 그 산하에 있으니까 꼼짝 못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할 때는 당연히 통계청이 가장 중요한 부처가 되고요, 그다음 관계 전문가도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타임스케줄을 이야기해 보라 이 말이지요, 언제부터 이 보조지표를 넣어서 국민들한테 똑바로 발표를 하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언제부터라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금년 중에는 당연히 모든 용역을 끝내 가지고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정희수 위원** 이것 전문가들 시키면 몇 개월이면 금방 나오는데, 이것 뭐 금년 안까지 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과거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정희수 위원** 금년 안에는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금년 안에는 저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정희수 위원** 결정하고, 그것 내년에 발표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 구성과 여부가 결정이 되면,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발표 시기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정희수 위원** 내가 들어 보니까 또뜻미지근한

데, 발표를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발표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인 정의가……

○**정희수 위원** 요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이것…… 통계학자들이 전문가인데 그것을 못 해요?

그것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땀땀하고 흘가분합니다. 처음에는 매 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 한번 어떻게 할 용의 있어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농림식품부 경우에 인력 공급회사 육성하는 것,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나 하면 농촌 경우에 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전문회사가 있다면…… 나는 피상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고 참 잘한다, 평소에 저도 여기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여기에 관련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정희수 위원** 그리고 교과부 쪽에서도 보면 교육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강사 보조인력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초·중·고 이것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쟁을 시키게 되면 이게 진짜로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농림부나 교과부나 이것도 진짜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내용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사실 이것 중기청이 다 하면 다른 부처 참 편할 텐데, 중기청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기에 이것 제대로…… 일자리 문제 갖고 이렇게 대통령도 걱정하고 그래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다.

○정희수 위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서, 특히 벤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벤처 쪽에 새롭게 일자리 창출 만드는 게 있으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아무튼 여기에 전부 다 일자리 만들기에 관계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일자리특위가 맡특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땀뿡기가 아닌, 허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기재부가 보따리 풀 때는 풀어야 되겠지만 꼭 생산적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

네 분 계시는데, 이어서 그냥 할까요?

5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아까 저는 7분 하라고 그래서 7분만 딱 했는데……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2분 더 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기재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12월 1일 날 라디오 연설을 하셨는데요, 청년실업을 위해서 미래산업 분야 청년 리더 10만 양성 계획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사전 협의를 했으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차관님, 혹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Go Future’인가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Go Future’ 새소식 코너에는 09년 3월 30일, 딱 1년 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인재 이야기 코너는 09년 4월 1일, 첨단의료 산업 참여공지는 09년 4월 7일, 이게 최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정부가 통합 포털을 만들기로 하는 결정이 그 후에 이루어지면서 저희 부처에서 노동부 쪽으로 옮겨가기로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공백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재부가 지금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포털이 노동부 쪽에 있는 것 모르고 그냥 만드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고용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종합 포털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09년 3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최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전인데 포털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 포털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면 아예 문을 닫아 버려야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주시해 보겠습니다.

10만 명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해 8월 각 부처로부터 중기 재정계획 조사했을 때 몇만 명이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작년에 저희가 1만……

○최영희 위원 1.3만 명……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만이 좀 안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저희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디벨로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최영희 위원** 채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17개, 한 38% 정도 되는 것은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 17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의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최영희 위원** 취업 알선, 인턴십, 취업정보 제공, 현장 실습 이렇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국가 고용정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 계획 수립하지 않았지요?

모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영희 위원** 수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수립하시겠습니까?

실무자 있으십니까? 언제 수립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국가고용전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망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곧 수립할 건가요?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윤종원** 지난번 1월 달에 대통령 모시고 했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했던 것들이 그런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더 구체적인 국가고용전망이 나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획을 만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선은 이런 것을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노동부와 함께 이런 것을 협조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윤종원**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창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법인, 개별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취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창업 법인을 지원하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이것은 중기청이 좀더……

○**최영희 위원** 중기청이 혹시 갖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중기청장입니다.

창업 법인, 특히 대기업에서 분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법인등록증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법인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적어도 일자리특위에 새로 창업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일자리특위 하는 동안에…… 한 달 이내에는 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미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하는 규제 면에서 특히 그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 간소화하는 쪽에 강조를 해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그것까지는 오랫동안 되어졌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창업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남아도…… 법인세를 감면

해 주겠다고든지 이런 획기적인 얘기가 나와야지만 가능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법인을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서 그게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일자리특위 아무리 얘기해 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차관님, 요즘에 노동유연성 얘기하면서 그래야지 고용이 많이 창출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퍼플잡(purple job)이니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연화라는 것, 이것이 흑시라도 비정규직 양산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사실 40%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당 임금이나 상여금, 휴가, 복지, 교육 이런 모든 면에서 풀타임제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퍼플잡입니까, 아니면 그냥 온갖 것에서 차별받는 그냥 파트타이머 이런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실제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각종 유연화를 위한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너무 과도한 차별이 나는 것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비정규직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또 만약에 과보호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것은 좀더 유연해지는 과정에 저절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그것은 저절로 시장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도 다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전문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또 여성부 정책까지 같이 여성부의 아주 최고의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퍼플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말한 퍼플잡은 정규직이고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열한 직장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성이라든지 또는—지금 퍼플잡은 주로 여성 갖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노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기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잡들이 없어 가지고 결국 풀타임을 하느냐 아니면 실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인구로 가느냐밖에 초이스가 없는 시장에 정규직으로 상용직으로 하면서 자기 여건에 맞도록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 창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저열한 자리를 만들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용안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윤석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5분입니다.

○윤석용 위원 기재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흑시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간호사가 많이……

○윤석용 위원 현재 간호사들이 장롱면허가 많다 하는 것도 아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노인요양제도를 설치하고 수십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나오신 것도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 사람들이 10%도 취업 못 한 것도 아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10%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이런 것도 국가에서 인력 수급을 좀 계획적으로 하고 제대로 대우도 해 주고 이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부 차관께서 보건복지 쪽으로 예산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는데 그것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 계획을 잘했다, 내가 수년 동안 외쳐도 잘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마는, 혹시 한나라당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5세 미만의 무상보육을 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한 것 혹시 보셨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봤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 부분은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윤석용 위원** 검토…… 당정협의를 안 거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굉장히 많은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그것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제도를 개선 안 하고는 안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윤석용 위원** 장애인 전담시설에서 차량 운전사의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시골에는 보육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근무를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 장애인 통합교육시설에는 특수교사를 못 구합니다. 과외를 하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로 저임금 받고 안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육 분야의 일자리 방안은 인력 투입이나 인건비 예산 없이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큰 그림에서는 정부가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도 항상 저희는 재정부담 및 형평성 같은 것을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방향은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다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없이 효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민간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도저히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대개 민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윤석용 위원**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보육 수요의 충족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디자인에 따라서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보육 부분에 있어서 과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풀다 보면 그것이 수요 쪽을 맞춰주면서 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용 위원** 상당히, 제가 보육 전문가로서는 선문답 같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돈 없이 어디 지원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정부 돈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민간 부분을 갖다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 보육 확대 이것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나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아까 거듭 말했지만 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분의 활성화 없이는 안 된다고 확실히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윤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것도 저한테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의 질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고용을 어떻게 늘리는지 이런 해법들을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에 의하면 고용투자세액공제 문제도, 이미 별 효력 없고 2년 전에 중지된 그러한 정책인데 다시…… 그때 100만 원 정도 지원하다 이제 3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 2월 달보다 한 25만 명의 취업이 늘었습니다, 올해가 1년 만에. 그것은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는 더더욱 부족한데 지금 당장 이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1년 동안 권고를 해도 1명의 취업희망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제안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인턴제가 지금은 다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영구적인 직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턴제로 했으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인턴은 하나의 아르바이트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가면 평생이 어렵고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인턴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력을 우리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중소기업, 지방 기업은 안 가고 대기업, 서울·수도권 기업에만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식 개선도 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테마별로 취업박람회 이런 것도 좀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구직자들의 연고기업을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장께서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희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차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해운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 불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산업의 경우 최근 울산 등지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라든지 한진중공업 사태 등에서 보듯이 대량 구조조정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선박 매입 등을 통해서 결국 사 측, 그러니까 사용자 측을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게 아주 노동집약적 산업 아닙니까? 이게 구조조정 되면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대량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각한 고용 악화 등이 초래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IMF 때 우리나라 배가 해운 불황으로 상당히 헐값에 외국으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용도 감소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어떤 케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걸 교훈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박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선박투자회사 제도라는 것을 틀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선박 데드 웨이트(Dead weight)

가 오히려 우리나라 선사가 늘었고요. 선사 수도 늘었고 선박 수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량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시의적절한 대처 방법을……

○**홍희덕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구조조정, 아까 말씀드렸다고 조선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노동집약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측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만든 배를 매입해 줌으로써 정부가 도산을 막고 도산을 막으면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조조정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울러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구조조정 당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요, 배만 사 줄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결과적으로 배를 사 준다는 것은 배를 그냥 사 가지고 운용을 안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선사에서 운용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홍희덕 위원** 차관님,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같은 데에서 그런 도움은 다 받고 구조조정은 해서 노동자들이 전부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 가는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에서 지금 보증을 해 줘서 그렇게 선박이 나올 때 선주가 인수를 못 하는 사태를 예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방도 하고?

○**국토해양부제2차관 최장현**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꼼꼼히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과부 차관님, 기재부 업무보고 11쪽에 보니까 인력 양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실 경영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과부 차원에서 부실 경영대학에 대한 실태라든가 그런 조사 계획 및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해서 경영 부실대학

8개 교와 경영개선 필요대학 4개 교를 선정한 바가 있고요. 올해에도 지금 저희들이 7월에서 8월경에 실태조사에 착수해서 연말에 경영 부실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부실 경영대학에 대한 조사 방법이라든지 기준, 구조조정 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경영 부실 진단기준은 재무지표가 5개고요, 또 교육지표가 6개입니다. 교육지표에는 취업률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서 부실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일자리만들기특위의 앞으로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사실 일자리만들기특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고용 창출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만들기 문제는 이제 저희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식 기반의 사회로 가고 이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정부가 고용 창출 정책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정부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시다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그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우리 경제 사회의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이 임금피크제는 사실 노동자 측에서도 이제 정년을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년을 연장하면서라도 이걸 수용하겠다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논의를 해 보니까 결국은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고, 또 노동자 측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의 임금만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감하면서도 결국 잘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이런 임금피크제 또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약 2350 시간으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잡 웨어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우면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공기업들에 이제 처음 입사하는 직원들의 임금만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을 요즈음에 노동계에다가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이제 공기업의 신입사원들 임금 삭감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해 버리는데 정부가 이 부분만 해도 접근을 잘못하고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노동시간 단축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자리특위에서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를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저는 경제계나 노동계가 우리 특위와 함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좀더 우리가 전략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두 말 할 것이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노동시간을 얼마를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가시적인 목표를 도출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 경제사회 주체들이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더 나가면 어떤 제도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을 함께 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이런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고민과 검토 이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정희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또 하실 거예요?

○정희수 위원 기재부 차관님, 우리가 미분양 주택 하면서, 사실 건설 경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까지 어떻게 면제해 주면서 하는 건데 그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하면 LTV나 DTI 그걸 좀더 완화를 시켜 주면 사실 양도세 감면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지금 미분양 주택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입니다. 지금 11만 9000 정도 되는데 사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LTV DTI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적용이 되고 있고, 지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큰 위험요소 중의 하나가,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인데 저희 가계부채는 바로 부동산을 사기 위한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TV·DTI 규제가 그나마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고 있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에는 큰 효과가 없으면서 오히려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45%, 한 50% 내외의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완화해 준다고 해서 지금의 가계부채에 그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 아닌가, 미국처럼 그렇게 100%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건설 경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다가, 선행하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비 없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내수시장이나 여기에 어려움을 갖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출구전략의 금리도, 그때 차관께서 직접 금통위에 참석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은은 금리를 높여야 된다고 하고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그 얘기는 여기에서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이 비록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만이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에 있는 사람만 해결하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투기 과열이 없는 지역에는 세컨드 홈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그 미분양 아파트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좀 신중하게……

내가 장관이었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국토부 장관한테는 이야기해요, 내가 상임위가 거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가 그것을 틀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무 부처가 국토해양부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기재부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아, 이것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차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장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얘기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정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거는……

교과부 쪽에 웨스트(WEST) 사업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정희수 위원** 이게 340명인데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인원을 한정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정희수 위원** 이것 많이 늘리면 상당히 글로벌 환경 하에 좋지 않으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해외 인턴십, 만약 해외 산업체에 직접 가서 근무를 하고 뭔가 얻는다 하면 이것은 외통부하고 같이 상의하고, 지경부도 있

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이것이 지금 갖 졸업한 대학생들의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강화할 의지는 없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다만 학생들이 인턴을 마치고 취업이 곧바로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 제도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인력을 우리가 육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비록 거기에 취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여기 국내 취업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홍영표 위원님 기재부 차관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도 해 보면 정부에서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말씀하신 내용대로 임금 피크라든지 또 일자리, 시간 단축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엽적인 내용이 되겠습니까마는 일자리 나누기가 신입 사원 그것 깎는 것으로 좀 잘못 오해된 부분은 아마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가,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등으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엔 7만 정도로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각 주체들이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 기재부의 1차관님께서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 무상 유치원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당에서 발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연봉 5100만 원을 넘는 부자 30%는 제외하고 그 이하의 70%에 대해서는 민간 보육료 그리고 유치원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일 많이는 38만 원부터 5세까지 가면 18만 얼마로까지 줄게 되어 있어요. 재원 부담 면에서는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쪽은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증액시켜 가는 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한 그런 정도의 돈이다. 11년, 12년 합쳐 가지고 6000억이 줄 못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바라구요.

그다음에 보육료하고 유치원 이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재원은 되는데 아까 윤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수준을 높여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간 보육시설 한 3만 3500개 정도가 전체 보육시설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놔두어 버리고 보육을 운운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재원상 어렵고’ 즉 얘기를 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민간 보육시설, 94%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짧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방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정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6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시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지 그것 뒤 저희가 다른 생각 그런 것보다도……

○**김광림 위원** 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씀해서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김광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요즘 여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조 7000억, 80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도 4대 강 연간 예산의 2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첫 해에만 6만 9615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계산은 제가 해 보았어요. 무상급식 예산의 산업연관표 식당 취업 유발 효과를 대비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교과부 차관께 물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만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100만 명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농산어촌 지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저소득층 중에서는 차차 상위까지를 다 포함할 경우에 한 100만 명 정도를 더 늘리면 그러면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한 26% 정도 되는데요, 전체 학생의. 그러면 그 비율로 봐서도 선진국 수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재균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교과부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그 이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부자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청장께……

청장님!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에 혜택을 주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논리,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온갖 파격적 특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대기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대기업으로부터 생긴 일자리는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통계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잘 아시고 계십니까.

대졸자들이 고용시장으로 몰려오는 지난 2월과 작년 2월 통계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자가 작년 대비 17만 4000명 늘었어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도리어 4만 9000명 줄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기업 특혜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었는데 대기업은 이렇게 일자리를 줄여 버리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요.

중소기업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 하나가 우수한 인력은, 물론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또 대졸 이상의 취업 예비생들의 현장과 맞춤형 교육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청장의 말씀은 어딘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현재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실익은 대기업이 챙겨 가고 중소기업은 빈껍데기만 주워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71%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21개 업체의 평균 이익은 3.93%로 반 토막에 그치고 있어요.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재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임금 격차가 2005년에는 67%였던 것이 2009년에 들어서 5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편향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면 당연히 정부도 거기에 호응해서 지원을 대폭 늘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5일에 KDI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업종별로 회사 실적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고환율 정책으로 이익 본 회사는 현대, 기아차, GM대우, 포스코,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대기업들뿐이에요. 나머지 중소기업 전문 업종들은 오히려 손해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땀질식으로 중소기업에 고용 보조비 몇 푼 쥐어 주고 지원금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낸 중소기업을 위주로 경제 정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차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허경욱**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원해 주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연 어

다 물건을 파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크는 것이 중소기업 시장을 창출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는 두 분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 제가 뭐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주호 차관님!

무상급식과 일자리, 이것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나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지금 학교 급식은 100%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광림 위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학교 급식을 100% 가까이하고 있는데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재원 문제지 일자리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 혹시 이게 국민들께서 잘못 생각해 가지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넓히지 못해 가지고 일자리하고 연결된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광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어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우리 교육부 차관님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압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국고가 473억 400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부에도 100억 정도가 그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대학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부 것은 조금 다름니다마는 대학에 굉장히 특혜를 준 건데 이게 인턴 조교나, 학교

에서 채용하는데 국고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학 내 교육 훈련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하고 2개를 합해 가지고, 인턴 등 학교 내 채용 지원이 32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대학 내 교육 훈련 지원이 국고 15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펀드로 가기로 했는데 매칭을 잘 안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최영희 위원** 대학들이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다 깎아 주었습니다. 50%, 30% 매칭을 20%로 다 깎아 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안전망의 어떤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최영희 위원** 그 안전망 중의 첫째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 보완 문제, 그다음에 나 홀로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음란물을 가정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치유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그리고 또 급식, 너무나 좋은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그것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주로 학습 보완이지요. 그래서 4시나 5시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끝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늦게까지 있지만.

그리고 4시나 5시에 끝나면 다시 나 홀로 아동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밤 8시·9시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들이 여기저기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마다 다 하고, 학교마다 1개가 아니고 2개씩 운영하고 이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이 밖에서 해서 아이들이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가야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로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아침에 가면 저녁에 엄마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오면서 찾아갈 수 있는,

애들을 데려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인데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입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인턴 정도밖에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들로 채우는 것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넣어 가지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문을 안 열려고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부딪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부산교육청 산하의 2개 학교가 지금 문을 열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않더라도 미국 같은 데는 YMCA나 이런 데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나 사회복지사들 또 이런 청소년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교실만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방과후 교실도 선생님한테 100만 원을 주고 1명이 아이들을 감감독 때까지 돌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원을 둘로 늘려야 되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이 돈이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장소 빌리는 값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들이 다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의지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적하신 미취업 대졸자 지원 사업은 작년에 추경으로 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작년은 워낙 경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올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좀 확충할 의향이 있는냐는 그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중일 돌봄교실을 2000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중일 돌봄교실을 파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선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금 그……

○**최영희 위원** 1명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 실무자가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장 최수태** 예,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최수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일 돌봄교실을 해 가지고 올해 2000개를 늘려서 지금 총 한 630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선생이?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장 최수태** 선생님이 그렇게 한 교실에 한 분씩 들어……

○**최영희 위원** 1명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장 최수태** 예.

○**최영희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장 최수태**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면에서 중일 돌봄교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내실화하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김재균 위원님 뭐 간단하게……

○**김재균 위원** 조금 전에 ‘무상 급식문제가 예산의 문제지 일자리 창출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재균 위원** 그것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급식을 하는 상황은 무상급식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지금 급식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하는 이슈는 급식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느냐 하는 그 이슈량은 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요 이게 사회서비스의 경우 아니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재균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창출이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을 산업연관표의 식당표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업유발효과를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 자체를 아예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하는 차관의 인식이 이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되풀이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지 말고 이게 사회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을……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사회서비스에 들어갈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해 봤다니까요. 거기에 식당표라고 나와 있어요, 계산방식이.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이미 그 인원은 다 취업자에 벌써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김재균 위원** 뭐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구먼요.

○**위원장 변재일** 자 그 문제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7개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대부분 다 들으셨겠지만 일자리문제가 원래 국가적 현안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현재 세계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접근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또 걱정하시는 분야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짧은 준비기간인데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정진섭 위원하고 강석호 위원님, 배은희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김용구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특위의 제2차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자리만들기특위를 만들면서 제가…… 정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보수적인 진영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도 공동체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 방향 가지고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업에만 맡길 일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게만 맡겨놓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우리 일자리특위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진하겠다는 내용 중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정책을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좀더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 자체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적당히 배분돼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부 1명씩 배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처 내에서도 기획재정부가 하고 싶은데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이견이 있으면 못하는 사항 등도 이 특위 차원에서는 한 번쯤 검토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의 전문위원들, 기획재정위의 전문위원

이외에도 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같이 지원…… 일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부처, 관계공무원들하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논의된 내용은 우리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여야 당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여야 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여야 간에 어떤 정책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만 된다면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도 아닌가 이렇게, 해결방안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강조하신 대로 그냥 허명뿐인 특위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2시에 개의해서 국무총리실 등 비경제 6개 부처로부터 고용 관련 업무 현황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님 끝까지 앉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님, 이주호 교과부 1차관님, 안현호 지경부 1차관님, 최장현 국토부 제2차관님 그리고 이인실 통계청장님,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서 오늘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석호 김광림 김성식 김재균  
 배은희 변재일 안효대 윤석용  
 정진섭 정희수 최영희 홍영표  
 홍희덕

○출장 위원(1인)

이명수

○청가 위원(2인)

김용구 박준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전문위원 김광목

○정부측 참석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제1차관 허경욱  
 차관 노래걸  
 예산실장 류성걸  
 경제정책국장 윤종원  
 정책조정국장 남진웅  
 공공정책국장 강호인  
 조세정책관 주영섭  
 사회예산심의관 김규욱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인재정책실장 최수태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규석  
 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학술연구정책실장 광창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기획조정실장 양태문  
 식품유통정책관 방문규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제1차관 안현호  
 기획조정실장 윤상직  
 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국토해양부

제2차관 최장현  
 기획조정실장 정창수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장만석  
 정책기획관 윤학배  
 주택정책관 이원재  
 종합교통정책관 여형구

노동부

장관 임태희  
 차관 이채필

통계청

청장 이인실  
 차장 김진규  
 기획조정관 문창용  
 통계정책국장 신윤수  
 조사관리국장 김광섭  
 경제통계국장 정규돈

---

사 회 통 계 국 장	오	병	태
중소기업청			
청 장	김	동	선
기 획 조 정 관	송	유	중
중소기업정책국장	정	윤	모
창업벤처국장	서	승	원
경영지원국장	강	시	우
기술혁신국장	김	태	일